

이슈브리프 848호
(2026. 5.27)

시진핑 방북 가능성 및 북중 정상회담의 전략적 함의

제848호

박병광 bkpark@inss.re.kr



국문초록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 가능성이 국내외 외교가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중국 경호·의전팀의 사전 방북 정황, 왕이 외교부장의 선행 행보, 북중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이라는 상징성이 맞물리면서 방북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물론 중국과 북한 간 최종 의제 조율 과정에서 일정이 연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남아 있지만, 최근 흐름은 시진핑 방북이 단순한 루머 수준을 넘어섰음을 보여준다. 북중관계에서 정상외교는 단순한 외교행사가 아니라 양국 관계의 전략적 방향을 조율하는 최고 수준의 정치 채널이다. 북중 정상회담은 '혈맹'과 전통적 우호관계를 재확인하는 상징적 행위이며, 북핵 문제와 미중 전략경쟁, 북러 밀착, 한미일 협력 강화 등에 대한 공동 대응 방향을 조율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 중국이 시진핑 방북을 추진하는 핵심 이유는 북한 문제를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통제하면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데 있다. 중국은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보다, 미국이 북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중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유지하려 한다. 따라서 시진핑 방북이 이뤄진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북중 전략협력 복원과 북중러 연대 관리, 그리고 북한의 대러 편중을 조정하려는 목적을 동시에 담게 될 것이다. 반면 북한은 중국의 지원과 체제 안정 효과를 얻으려 하면서도, 중국에 과도하게 종속된 모습을 경계하며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려는 복합적 셈법을 갖고 있다. 향후 북중 정상회담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공동성명에 '비핵화', '한반도 안정', '전략적 소통과 협력' 등의 표현이 어떤 수준으로 담기느냐에 있다. 비핵화 언급이 약화되고 정치·안보 협력만 강조될 경우 중러북 연대 강화 흐름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중국이 대화 재개와 긴장 관리 의지를 드러낼 경우, 이는 북러 밀착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 채널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북핵 관리와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보다 현실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과제는 북중 정상회담이 설계한 판 위에서 뒤늦게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판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국이 원하는 의제와 조건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능동 외교로의 전환이다.

주제어 : 시진핑, 북중관계, 정상외교, 비핵화, 한반도 안정

최근 국내외 언론과 외교가를 중심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단순한 추측을 넘어, 실제 외교·정보 라인에서 비교적 진지하게 관측되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중국 경호·의전팀의 사전 방북 정황, 왕이 외교부장의 선행 방문, 북중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이라는 정치·외교적 상징성이 맞물리면서 방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물론 막판 연기나 무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중국과 북한 모두 복합적인 전략적 이해관계를 안고 있는 만큼, 최종 의제 조율이 난항을 겪을 경우 일정이 뒤집힐 수도 있다. 그럼에도 최근의 제반 정황을 종합할 때 시진핑의 평양 방문을 근거 없는 루머로 일축하기는 쉽지 않다. 이 글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방북 가능성을 둘러싼 배경과 동인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중국과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중관계에서 정상외교가 갖는 의미

북중관계에서 정상외교는 단순한 외교행사를 넘어 양국 관계의 전략적 방향을 조율하는 최고 수준의 정치 채널로 기능한다. 중국과 북한 모두 최고지도자의 의중이 정책 결정 전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 정상의 만남은 외교·안보·경제·군사 분야 전반에 대한 관계 재조정과 전략적 메시지 발신의 의미를 갖는다. 동시에 북중 정상회담은 양국이 공유해온 ‘혈맹’과 전통적 우호관계를 재확인하는 상징적 행위이기도 하다. 특히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평가가 제기될 때마다 정상외교는 정치적 신뢰 회복과 관계 안정화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대내적으로는 체제 정당성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북중관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여주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북중 정상외교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전반에 대한 공동 대응을 조율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북핵 문제, 미중 전략경쟁, 한미일 협력 강화, 북러 밀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양국이 공동 인식을 조율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에게 정상외교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관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거나 독자노선을 강조할 경우, 중국은 정상외교를 통해 북한을 다시 자국 중심의 전략적 궤도로 끌어들이려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와 함께 북중 정상회담은 미국·한국·일본 등 국제 사회에 대한 전략적 메시지의 성격도 강하다. 정상 간 만남 자체가 북중관계의 밀착 수준과 전략적 연대 정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북중 정상외교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과 동북아 전략 구상을 드러내는 중요한 외교적 행위로 평가된다.

시진핑 방북 추진의 동인과 제약 요인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의 보도와 정부 고위 당국자의 첩보를 통해 중국의 경호 및 의전 실무팀의 평양 방문 정확이 포착되면서 시진핑 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시 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연쇄 정상회담을 마치고 대미 협상과 대러 공조의 틀을 짠 직후라는 타이밍은, 북한 방문을 통해 동북아 정세의 주도권을 과시하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대미 레버리지를 확보하려는 중국의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올해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이라는 외교적 명분과 더불어, 연초 한국 정부의 베이징 방문 당시 제기된 남북 관계 중재 요청 및 미·중 정상회담의 북핵 관리 요구가 맞물리면서, 중국이 동북아의 중재자

(피스메이커)로 전격 등관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이 성숙한 점도 방북 성사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핵심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시진핑 주석의 방북 성사를 가로막는 제약 요인도 만만치 않은데, 우선 방북설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제공할 정보가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끼는 비공개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최종 의제 조율이 난항을 겪을 경우 언제든 일정이 연기되거나 무산될 소지가 존재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관리를 위해 한반도 안정과 북한의 도발 억제를 원하는 중국과, 최근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든든한 뒷배를 얻고 독자 노선을 강화해 온 북한 사이에 비핵화 및 대러 관계를 둘러싼 정세 인식의 이견이 팽팽하다. 특히 북한은 대미·대남 대화의 주도권을 직접 쥐려 하기 때문에 시 주석이 중재자 자격으로 평양을 찾는 그림에 김정은 위원장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실무 경호팀의 움직임이라는 긍정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까다로운 의제 조율 실패와 북한의 독자 행보 변수로 인해 방북이 막판에 보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의 전략적 의도와 핵심 의제

시진핑의 평양 방문은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다. 미중 정상 회담, 중러 정상회담에 이어 북중 정상회담으로 완결되는 연쇄 외교는 중국이 미국 주도 질서에 맞서는 대항 연합의 중심축임을 선언하는 전략적 퍼포먼스다. 중국의 셈법에서 가장 정교한 부분은 북한 카드를 소모하지 않고 관리한다는 데 있다. 중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지속될 때 중국의 전략적 가치는 극대화된다. 미국이 북한 문제를 다루려면 반드시 중국을 통해야 하는 구조, 바로 그 구조를 중국은 보존하려 한다. 오는 9월 예정된 2차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그 협상 레버리지를 손에 쥔 채 워싱턴과 마주하겠다는 선제적 포석이다. 한반도 중재자 지위의 선점이라는 셈법도 이와 맞닿아 있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협상을 성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협상의 조건을 통제하는 것이다. 미국에는 비핵화 목표를 공유한다고 선언하면서 평양에서는 비핵화를 입에 올리지 않는 이중 언어가 이 전략의 본질이며, 실제로 시진핑은 지난해 9월 북중 정상회담에서 과거와 달리 비핵화를 단 한 차례도 촉구하지 않았다.

북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이러한 전략적 맥락 위에서 읽혀야 한다. 표면적으로는 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 안정이 오를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과 한국의 희망 사항에 가깝고, 실질적 의제는 북중 동맹의 전략적 복원과 북중러 3각 연대의 심화에 있다. 지난해 베이징 전승절에서 세 정상이 텐안먼 망루에 나란히 섰던 장면의 연장선에서, 이번 평양 정상회담은 그 결속을 제도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방북의 이면에는 북한의 대리 편중을 교정하려는 과제도 내재돼 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의 군사·경제적 밀착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희석돼 왔고, 중국으로서는 북한을 자국의 전략적 완충지대로 유지하기 위한 관계 재조정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 방북의 외피는 우호와 연대이지만 그 내면의 논리는 냉철한 세력 균형의 재조정이다. 결국 시진핑의 평양행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북한 문제를 관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전략의 발현이며, 비핵화를 추진하지도 북한의 도발을 방치하지도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가장 비싸게 파는 타이밍을 노린 행보다.

관전 포인트와 북한의 복합적 셈법

시진핑의 방북이 성사되어 북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북중관계의 성격과 방향이 어떤 방식으로 재조정되느냐에 있다. 특히 공동성명이나 공개 발언에서 ‘비핵화’, ‘한반도 안정’, ‘전략적 소통과 협력’, ‘전통적 우호’ 등의 표현이 어떤 수준으로 담기느냐가 핵심이다. 만약 중국이 북한 문제 관리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북핵 문제에 대해 일정 수준의 원칙적 언급을 유지한다면, 이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균형적 접근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대로 비핵화 언급 없이 북중 간 정치·안보 협력 강화만 부각될 경우, 이는 북러 밀착과 더불어 중러북 연대 강화 흐름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제협력 확대 여부도 중요한 변수다. 북중 교역 정상화, 접경지역 개발, 인프라 협력 등이 논의될 경우 이는 북한 경제 안정과 중국의 대북 영향력 회복 의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이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공동 대응 성격을 띠는지, 혹은 북러 밀착을 일정 부분 관리·조정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는지도 중요한 관전 요소가 될 것이다.

북한의 대응 셈법 역시 매우 복합적이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시진핑 방북 자체를 체제 안정성과 외교적 위상 강화를 과시하는 계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과 북러 밀착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최고지도자의 평양 방문은 북한이 여전히 중국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존재임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상징적 효과를 가진다. 동시에 북한은 이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경제협력 확대와 체제 안전 보장 차원의 지원을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한은 중국에 과도하게 종속된 모습을 보이는 것 역시 경계할 수밖에 없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해 온 배경에는 대중 의존도를 낮추고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시진핑 방북을 적극 활용하되, 중국의 영향력 아래 일방적으로 편입되는 모습보다는 ‘대등한 전략적 협력관계’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파급영향 및 한국의 대응 방향

북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이는 단순한 양자 정상외교를 넘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상회담에서 북중 간 정치·안보 협력 강화와 군사 협력 확대 가능성이 부각될 경우,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흐름과 맞물려 동북아의 진영 대립 구도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공동성명에서 ‘비핵화’ 표현이 약화되거나 제외되고 체제안전·전략 협력 등이 강조된다면 북한의 핵보유 현실화를 사실상 묵인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중국이 한반도 안정과 대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할 경우, 이는 북러 밀착을 견제하고 한반도 긴장 고조를 관리하려는 전략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경제협력 확대와 접경지역 개발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결국 시진핑 방북은 북중러 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남북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지정학적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각변동 앞에서 한국에게 요구되는 것은 과잉 반응이 아니라 선제적이고 구조적인 전략 대응이다. 우선 공동성명 문구와 군사·경제협력 내용, 북핵 관련 표현을 면밀히 분석해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방향을 조기에 파악해야 한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 채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균형적 접근이 동시에 요구된다. 비핵화 중재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 북한의 추가 도발과 핵 실험 억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외교다. 북중러 연대 강화에 대비한 억제력을 유지하되, 이를 지나친 진영 대결 구도로만 몰아가지 않는 외교적 유연성도 필수적이다. 결국 한국의 과제는 북중 정상회담이 설계한 판 위에서 뒤늦게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판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국이 원하는 의제와 조건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능동 외교로의 전환이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